

「정보문화의 달」행사는 정보문화확산운동의 기폭제



정진일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올 해로 일곱번째를 맞이하는 '6월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환경이 너무도 많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사실 제1회 정보문화의 달이 시작되던 80년대 말 정확히 말하면 서울올림픽이 열린던 88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정보'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인식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개인용컴퓨터의 주종이었던 16Bit XT급이 이제는 단종되어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그 가격이면 지금 성능이 몇십배나 좋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고급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국민학교 학생들이 교과학습에 컴퓨터를 활용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컴퓨터의 활용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등 정보시대의

핵심기인 컴퓨터의 기술 및 이용환경이 무척이나 많이 변모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용 컴퓨터보급대수는 400만대에 이르며 이중 150만대 이상이 가정에 보급되어 있다고 한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60만명에 이르고 이를 통한 광고마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고 하니 수년간의 변화는 참으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수준이면 아니 최근의 컴퓨터보급의 추이나 기업과 정부의 그리고 가정의 컴퓨터 활용의지를 보면 세삼스레 정보문화확산운동을 운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한 조사에서 나타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이 선진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국내 정보화수준 경쟁국 대비 열악

먼저 개인용 컴퓨터의 기술수준을 보면 PC의 핵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설계기술이나 생산 기술은 미국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은 각각 3과 20 정도의 수준이며 PC용 칩세트 설계기술이나 생산기술, 기본 입출력장치 기술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메모리 설계나 마더보드 설계 및 생산기술만은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의 보급수준(91년 기준)을 보면 인구 1천명당 중·대형 컴퓨터의 보급 수준은 미국이 5.7대인 반면 한국 0.3대, 대만 0.6대, 일본 0.4대에 이르며 PC의 보급수준도 인구 천명당 미국 263대, 일본 114대, 대만 54대로 우리의 50대에 비해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업이나 정부의 정보화투자, SW 개발능력 등 21세기를 주도할 정보통신산업의 기초기반이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음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예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정보화예산의 비율이 우리의 경우 0.26퍼센트로 미국의 1.14퍼센트, 일본의 0.69퍼센트에 훨씬 못미치며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도 0.37 퍼센트로 우리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전반적 분야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폭증하는 국민정보

이용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정보기술개발 및 기기보급 확대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보통신사업 육성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정보사회 조기구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새로운 정보문명에 대한 이해와 국가정책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굳이 선진국의 예를 들지않더라도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정보화를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요소로 인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만의 경우 79년 정보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정보화 촉진 및 정보이용 생활화를 위한 홍보, 계몽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82년 부터는 매년 10월 한달을 정보화월간으로 설정, 전시회, 강연회, 학술행사, 공모행사 등 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행사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싱가폴의 경우도 국가 전산위원회(National Computer Board)가 중심이 되어 IT Plan을 수립,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으며 83년부터 매년 12월에 1주일간의 '정보기술주간'을 설정, 전시회, 국제학술행사, 소프트웨어경진대회 등 자국의 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 들어 「Information Super Highway」 나 「신사회자본」이니 하면서 21세기 정보시대의 새로운 국가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정보기반의 정비를 국가

21세기 정보사회에서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국민정보이용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정보통신사업 육성책이 필요하며 정보사회 조기구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새로운 정보문명에 대한 이해와 국가정책적 활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1의 목표로 각국이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도 이러한 정보사회로의 총체적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 총 45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의 투자계획을 수립, 정보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하드웨어적 투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새로운 기술과 기기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것이며 새로운 기술중심의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과급효과와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를 바람직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Technological Push)에 부응하는 사회적 견인력(Societal Pull)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적시할 필요가 있음도 이 때문이다.

정보문화확산운동이 뿌리내리려면

정보문화의 달 제정 배경은 바로 국민들의 정보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정보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대중화, 일반국민들의 정보이용생활화를 이룩하는데 있다.

제 7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으며 정보문화를 국민생활속에 뿌리내리고 정보사회의 발전 방향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염려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그동안 일부 부처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전부처로 확산시켜야 하며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수단으로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수용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치권을 포함한 국가정책결정자들의 정보화에 대한 획기적 인식의 제고는 물론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정보화를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시켜 나가려는 통치권자적 결단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고속정보통신망」의 건설에 업계를 포함한 행정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싱가포르 「IT 2000」이라는 국가발전계획을 수립, 이광요 전수상이 선두에 서서 이를 이끌어 나가고 있음은 이제 정보화는 단지 기업의 생산성이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작업이 아닌 21세기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야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적 정책목표임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산업, 특히 하드웨어의 발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도산업으로 부상될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국가적 개발 및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통신부문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단지 컴퓨터프로그래밍이 아닌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게임, 영상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소프

트웨어 등 우리의 문화생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를 국가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셋째,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적, 계층적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사회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지역격차의 문제가 정보사회에서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관심과 주의가 요청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지역산업,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하며 일방적인 정보의 수용체가 아닌 정보의 발신체로서의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지역자체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배려와 대응이 요구된다. 정보를 많이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국가 정책이며 이를 위한 공익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의 추진, 이들을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개발 보급, 농어촌 낙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지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화교육의 체계적 실시가 요청된다. 미래사회는 문명이 정보기술이

중심이 되는 정보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 대상의 평생교육으로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의 유효적절한 활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의 기본적 소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정보화교육은 물론이고 주부, 직장인, 노년층 등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리커런트교육(평생교육) 시스템이 제도적 차원에서 육성되고 발전되어져야 한다.

최근 서울시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52퍼센트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중 40~50퍼센트가 구입목적과는 달리 게임이나 오락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음란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부재에도 원인이 있지만 정보기기의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함께 이들을 계도해주어야 할 부모들의 컴퓨터에 대한 무지와 소홀에서 비롯된 하나의 병폐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급변하는 정보화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급속한 기술변화에 따른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함은 물론 조직내에서도 사무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가야 한다. 고도정보사회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걸맞는

이제 정보화는 단지 기업의 생산성이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작업이 아닌 21세기 국경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적 정책목표이다.

정보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하에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이의 대중적 확산으로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모습을 구현해가는 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주요한 임무

정보화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구현은 우리의 임무

산업사회에서 낙오되어 어려운 근세를 보내야했던 우리 민족사를 되돌아보고 정보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 앞에서 다시는 그 같은 오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이 분야의 몇몇 선각자들에 의해 시작된 정보문화화 확산운동을 이제 우리의 생활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뿌리내려 나갈 것인가?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총체적 삶의 양태를 특징짓는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정보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하에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이의 대중적 확산

으로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모습을 구현해가는 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주요한 임무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제7회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으며 정보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 측면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문명이 우리에게 가져올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와 변화를 생각하며 이를 조화롭게 이끌어 가려는 진지한 반성과 노력이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이번 한달 동안 전국에서 개최되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를 기폭제로 정보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위기가 일년 내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 ❖

신규필자모집

1. 원고내용 : 정보통신 관련 제언, 정책동향, 기술동향, 법령해설 등 정보사회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글
2. 분 량 : 30매 내외(200자 원고지)
3. 마 감 : 매달 25일
4.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28
 데이콤빌딩 1401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진흥부
 TEL : (02) 796-6443 FAX : (02)796-6510
5. 기 타 : · 도착된 원고는 반환치 않으며,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원고 제출시 증명사진 1매, 약력,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온라인통장번호 등을 작성해 주십시오.